

'영·유아보육법' 여성계 드센 반발

국회 보사위에서 14일 민자당 찬성만으로 통과된 영·유아 보육법에 대해 여성계·유아교육계·탁아관련 단체들은 "여성계와 아동을 위한 복지법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본회의 통과 저지, 재제정 촉구 등 반대운동을 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탁아입법은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으로는 저소득층의 탁아수요에 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여성계의 문제제기로 추진돼 89년 평민당이 '탁아복지법(안)'을, 민자당은 지난달 21일 '영·유아 보육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탁아관계자들이나 여야 간에 이견이 많아 올해 법안 심의와 의견조정을 해서 내년초 임시국회로 제정이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던 탁아입법이 민자당의 강행방침으로 12·13일 이틀동안 줄속심의를 거친 뒤 14일 이번 회기 첫 날치기 통과를 기록하며 만들어졌다.

'탁아문제를 사회복지의 하나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민자당이 만든 영·유아 보육법은 △서울과 지방에 중앙보육위원회·보육정보센터 설치 △탁아시설 설립 주체를 법인체·민간인으로 확대 △탁아 행정의 보사부 일원화 △법정 영세민 자녀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당초 법안에 △보육교사 기준 명시 △국·공립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우선 설치 등을 보완하긴 했지만 영·유아 보육법은 법정 영세민에

재개정 움직임 등 반대운동 전개 밝혀



13일 오후 국회 정문앞에서 영·유아 보육법(안) 조기입법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일하는 어머니'들과 탁아교사들.

'보사부 일원화' 등 문제안고 날치기 통과 "인·허가규제 많고 복지대책 미흡" 비판

대한 지원만을 명시, 복지법을 내세운 정부의 의지는 선언뿐이라는 지적이 높다.

평민당 박영숙 부총재는 "민자당이 여성계·교육계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찬반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날치기 통과시킨 영·유아 보육법은 온전한 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여성계와 탁아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91년 1월 임시국회에 재개정안을 제출, 영·유아 보육법 개정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자당 신영순 의원쪽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했다"면서 "일단 1년 만이라도 시행해보고

문제가 나타나면 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성단체연합 탁아문제 특별대책위원회는 "영·유아 보육법은 행정 편의적인 인·허가 규정과 보육위원회 설치로 인한 획일적 통제가 강화됐을 뿐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월소득 4만8천원 미만의 법정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한 것은 복지법이 될 수 없다는 것.

여연 탁아특대위는 16일 오후 2시 여성백인회관에서 '민자당 영·유아법 날치기 통과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에 "여성 복지법 차원의 탁아법 재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나영희 여연 사무국장은 밝혔다.

사회학·아동학·유아교육학 전공 교수와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공동 육아와 미래의 어린이를 걱정하는 모임'(대표 조형)도 "탁아법이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복지법이어야 함은 기본 전제"라면서 영·유아 보육법은 △지원은 적고 간접·규제가 많으며 △시설기준·운영·제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시행령으로 미룬 점 △탁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선언으로만 처리하고, 시설의 인·허가·취소 등은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조항이 많은 점 등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주변 등지에서 탁아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소속 탁아소들도 "현재 빈민지역에서 실질적인 탁아활동을 펴고 있는 비영리 민간탁아소에 대한 지원 규정, 경과 조치 등이 없는 영·유아복지법은 진정한 복지법이 못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탁아행정의 보사부 일원화를 규정한 영·유아 보육법(안)에 반대했던 YWCA, 한국부인회, 노동부를 비롯해 유아교육학회, 전국유치원교사협의회 등도 영·유아 보육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 연말 여성계에 영·유아 보육법 반대운동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신연숙 기자〉